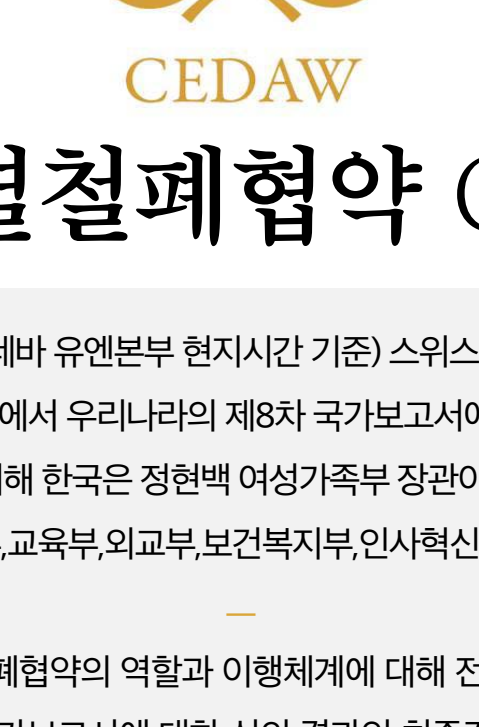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여성정책이슈나 다양한 여성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새롭게 개편된 <KWDI Brief>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2018년 2월 22일(제네바 유엔본부 현지시간 기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CEDAW 제69차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됨.

한국은 이를 위해 한국은 정한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개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경찰청,창의재단과 함께 참석함.

본고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역할과 이행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2015년 7월에 제출된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인 최종검해 사항의 내용에 대해 정리함.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란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활발히 전개되었던 국제여성운동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됨.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국제 여성의 날 행사에서 젠더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세계행동 강령 발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음¹⁾.

-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기초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작성되었으며 1979년 12월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에서 공식 채택됨²⁾.

- 1979년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189개 국가가 비준하였으며, 협약 당사국들은 4년마다 국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심의를 받음.

- 한국은 1984년 12월 협약에 비준하였으며, 2015년 7월 제8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2월 22일(제네바 유엔본부 현지시간 기준) CEDAW 제69차 세션에서에서 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됨.

1) 양원미, 2013. 214 (김영민,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법, 제1호, 1996. 107-137에서 재인용)

2) LSE 블로그, <http://blogs.lse.ac.uk/aviv/int/cedaw/> 접근일자 [2018.04.03]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및 선택의정서(OP-CEDAW) 주요내용 3)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 CEDAW는 여성인권을 위한 포괄적인 법률로서 법령은 전문을 포함하여 총 6부,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 및 양성평등의 원리, 그리고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밝히고 있음.

- 법령 서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에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라고 밝히며 여성차별문제의 국가적 문제해결 책임과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⁴⁾.

- 제1부 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⁵⁾.

- 2조와 3조는 당사국 헌법과 이의 관련법이 성평등의원칙을 명시하고 성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과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4조에서는 법률적인 조치 이외에 남녀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s)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성차별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 원칙을 법적절차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5조, 6조, 7조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는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원임금 등 정치적인 권리의 보장과 더불어 교육, 고용, 보건, 경제, 지역, 혼인과 가족관계 등 여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요내용	
제1부	차별의 정의(제1조), 당사국의 여성차별 철폐의무(제2조), 여성의 완전한 발전, 향상의 확보 (제3조), 특별조치(제4조), 남녀의 역할론 극복(제5조), 여성의 매몰 및 해탈(제6조)
제2부	정치적, 공적 활동(제7조), 국제적 활동(제8조), 국적(제9조)
제3부	교육(제10조), 고용(제11조), 보건(제12조), 경제·사회·화적 활동(제13조), 농촌여성차별 철폐(제14조)
제4부	법 앞의 남녀평등과 민사관계(제15조),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여성차별 철폐(제14조)
제5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운영 및 권한(제17조~제22조)
제6부	협약에 대한 해당국가의 의무 및 절차(제23조~제30조)

출처: 여성가족부(2018.2.21).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제사회 조약에 귀 기울여 성평등 기반 다진다. 정책브리핑⁶⁾

- 유엔 회원국들은 동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들을 도입할 것을 약속하게 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함⁷⁾.

- 남녀평등의 원칙을 당사국 법적 제도 내에 반영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을 철폐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법을 제정함(이는 성차별 근절을 위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법적절차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재판소(tribunals)나 기타 공적 제도를 설립함.

- 개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 기업체 등이 행사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행위 근절을 보장함.

- 정부는 차별적인 법, 정책, 프로그램, 가치, 관습, 문화에 책임이 있음

- 이외에도 평등의 원칙과 철폐한 권리 기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생산권은 여성의 권리이고, 문화와 전통의 영향력도 젠더역할과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유일한 협약임.

3) 인권운동사랑방 <http://sarangbang.or.kr/info/Un/Uni_CEDAW.html> [접근일자 2018.04.03]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서문 참조

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 참조

6) 여성가족부(2018.2.21).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제사회 조약에 귀 기울여 성평등 기반 다진다.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totalSearch.do;JESSOIND_KOREA+H+9XpZ69UJ+HdR3d4fc5R_P2JL10bMPKZ_6PY+ekHfnq82G+102014807781840679?where=ALL&op=&multiFlag=Y&dt_president=&dt_newsml_code=&dt_subject_code=&dt_dept_type=&dt_dept_code=&dt_news_type=&dt_doc_type=&tabdept=18&tabsubject=18&opSearchKeyword=cadaw [2018.4.23]

7) UN Women 홈페이지 내 CEDAW 섹션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 (2018.4.10)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OP-CEDAW)

- 여성차별 철폐협약 선택의정서 (OP-CEDAW)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특히 청원제도(개인청원서, 당사국포함)를 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정서로서 1999년에 채택되어 2000년 12월 22일에 발효하였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또는 그룹이 국내적 구제절차(domestic remedies)를 거쳤음에도 권리침해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음.

- 또한, 선택의정서에는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침해당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비밀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당사국을 방문할 수 있음(Country Inquiries)⁸⁾.

8) 인권운동사랑방 <http://sarangbang.or.kr/info/Un/Uni_CEDAW.html> [접근일자 2018.04.03]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의의

- 여성은 인류 역사 이후 지속적인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였으나, 동 협약 채택 이전까지 이러한 여성의 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적 조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동 협약의 가장 큰 의의가 있음

- 여성차별철폐협약은 UN과 ILO 등 이제까지 채택된 양성평등관련 국제문서의 내용을 집대성 하였으며, 특히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와 같은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⁹⁾.

- 이에 덧붙여, 그동안 인권법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던 가족, 섹슈얼리티, 가사노동 등의 사안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 개인, 단체, 기업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남성과 여성의 사회 및 문화적 행동양식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등으로써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포괄적 법적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음¹⁰⁾.

- 여타 국제인권협약들은 개인의 권리 및 처벌에 중점을 둔 반면 CEDAW는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 이데올로기, 제도 등에 중점을 둬, 또한 다른 국제인권협약들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책임을 정부기구에 몰았지만, CEDAW는 비정부 기구와 가족같은 제도에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인권협약과 차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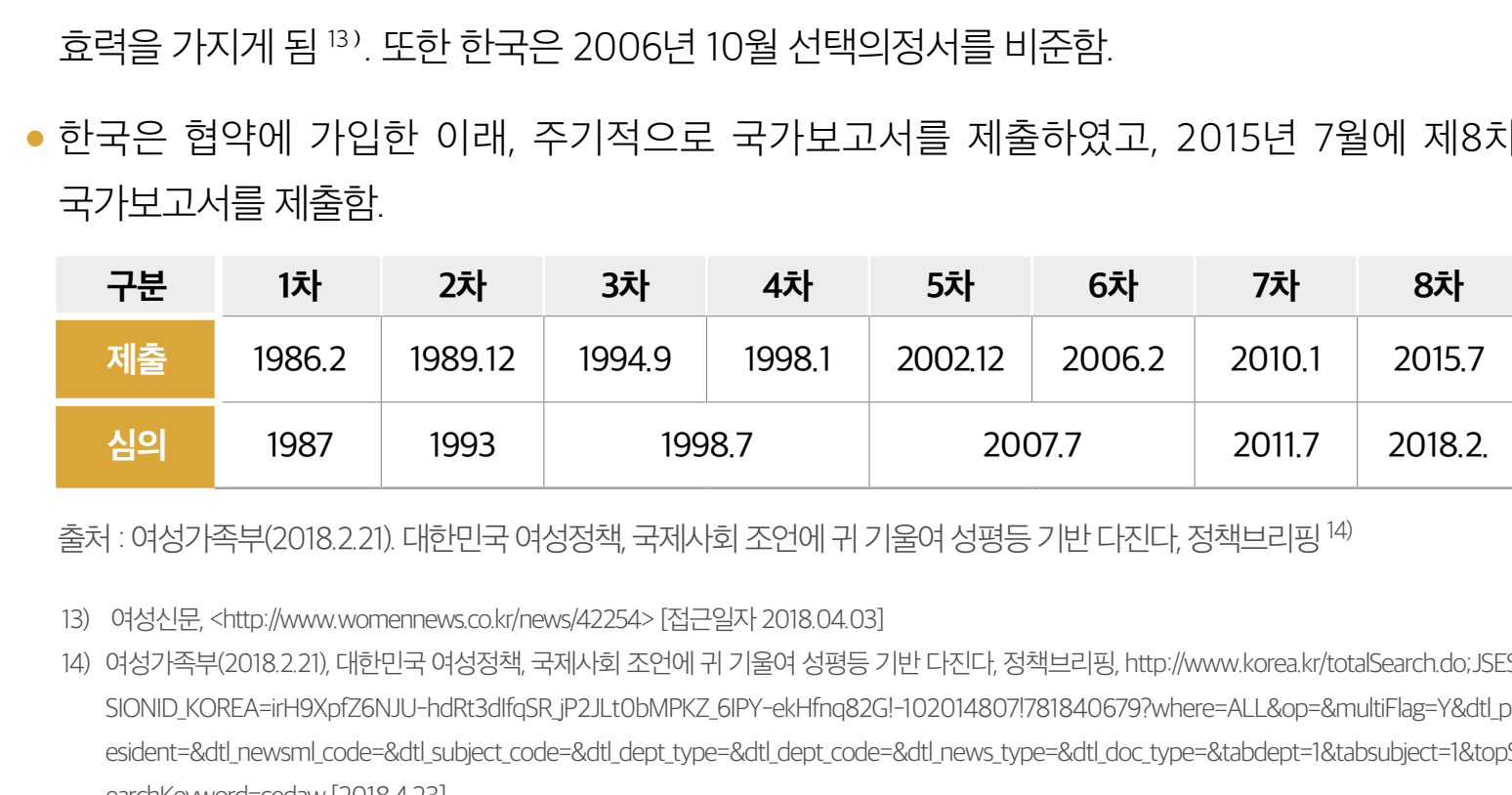
- 이러한 특성으로 여성인권을 위한 국제권리장전(an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for women)으로도 불리며 다수 협약 당사국은 CEDAW를 비준함과 동시에 자국의 의회에서 채택하였고 자국 내 여성차별철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삼음

9) 양원미, 2013. 214 (김영민, 전제는 문:107-108에서 재인용)

10) 양원미, 2013. 215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이행 절차 11)

-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 견해를 통한 권고,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해석(일반 논쟁) 등을 발표함¹²⁾.



11) LSE 블로그, <http://blogs.lse.ac.uk/aviv/int/cedaw/> 접근일자 [2018.04.03]

12) 양원미, 2018.2.21).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제사회 조약에 귀 기울여 성평등 기반 다진다.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totalSearch.do;JESSOIND_KOREA+H+9XpZ69UJ+HdR3d4fc5R_P2JL10bMPKZ_6PY+ekHfnq82G+102014807781840679?where=ALL&op=&multiFlag=Y&dt_president=&dt_newsml_code=&dt_subject_code=&dt_dept_type=&dt_dept_code=&dt_news_type=&dt_doc_type=&tabdept=18&tabsubject=18&opSearchKeyword=cadaw [2018.4.23]

당사국 보고서

State Re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국보고서에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당사국의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사국은 이행 보고서를 협약 가입 직후 1년 이내, 그리고 이후에는 매 4년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에 심의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제안 및 권고를 할 수 있음.
--------------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채택과 함께 동 협약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가 구성됨. 동 위원회는 협약당사국 23명의 독립적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중 1명의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Rapporteur이 전문을 수행함.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 가능함.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1)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은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당사국보고서(State Report)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 보고서를 포함하여 동 협약 이행에 대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를 통해 유엔총회(UN General Assembly)에 보고 2) 개인 및 단체 진정 접수 및 심사(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 3) 동 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을 조사(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하는 것 등이 포함됨. 한국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김영장 전 제2정무장관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신혜수 위원이 동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함(2003-2004년에는 부의장 역임)
-----------	---

패럴렐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외에도 패럴렐보고서(Parallel) 혹은 그림자보고서(Shadow Reports)라고 불리는 지역 NGO 혹은 CSO에 의해 작성된 당사국의 권고사항 이행과 당사국의 인권적 맥락과 분석을 포함하는 보고서의 제출을 권고하며 이 보고서는 당사국에서 발행된 정식보고서와 실질적인 여성평등권을 위한 투쟁사이의 공백을 매우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함.
--------	--

한국의 CEDAW 비준 및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

- 한국의 경우 1983년 5월 25일 세계에서 90번째로 비준했으며 1984년 12월 18일에 국회의 협약비준 동의를 얻음으로써 본 협약은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에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¹³⁾. 또한 한국은 2006년 10월 선택의정서를 비준함.

- 한국은 협약에 가입한 이래, 주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5년 7월에 제8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함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제출	1986.2	1989.12	1994.9	1998.1	2002.12	2006.2	2010.1	2015.7
심의	1987	1993	1998.7			2007.7	2011.7	2018.2

출처: 여성가족부(2018.2.21).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제사회 조약에 귀 기울여 성평등 기반 다진다. 정책브리핑¹⁴⁾

13)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42254> [접근일자 2018.04.03]

14) 여성가족부(2018.2.21).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제사회 조약에 귀 기울여 성평등 기반 다진다.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totalSearch.do;JESSOIND_KOREA+H+9XpZ69UJ+HdR3d4fc5R_P2JL10bMPKZ_6PY+ekHfnq82G+102014807781840679?where=ALL&op=&multiFlag=Y&dt_president=&dt_newsml_code=&dt_subject_code=&dt_dept_type=&dt_dept_code=&dt_news_type=&dt_doc_type=&tabdept=18&tabsubject=18&opSearchKeyword=cadaw [2018.4.23]

제8차 CEDAW 한국 정부 심의 결과

- 2018년 2월 22일 위원회의 제8차 한국 CEDAW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동 심의에서는 한국 사회의 주요 여성인권 현안이 다뤄짐.

- CEDAW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 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 등에 관하여 권고하였으며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차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상당한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성당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및 화해-중재를 통한 해결 금지, 가해자의 법적 처벌 보장 등) 3) 온라인 플랫폼 및 유포자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제재 등을 포함한 온라인 성폭력 처벌법(가해자 처벌을 없애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합병증을 겪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사이의 공백을 매우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함.

15)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10-11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검해 요약*

권고 항목	권고 내용
유보사항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1항(a)호에 대한 유보 철폐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 차별관련 법률	여성에 대한 작-간접적인 차별, 취약집단의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적 형태의 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
당사국의 역외 의무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이 여성 및 여아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 기구	(a) 「대통령령상 성평등위원회」의 설립 및 필요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및 명확한 임무 부여 (b) 성별영향분석평가 체계의 강화 및 모든 수준의 지방 정부에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갖춘 (c) 성인지 예산-결과지향적 성선포의정서 이행의 기능을 강화할 법적 기반 마련 및 필요한 자원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젠더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충분한 자원 할당
한시적 특별조치	한시적 특별조치의 활용 및 일정 수업을 통해 모든 수준의 공립학교 및 학계, 그리고 공공민립대학을 포함한 공공 부문 공무원에서 동등한 여성대표성 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	(a) 형법 제297조를 개정(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강간 정의 및 부분강간의 명확한 범죄화) (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이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동성가부를 더 3가족, 그리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으로 확대 (c)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죄 등 형사소송절차의 난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d) 피해자의 성 이력이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e)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강화
인신매매 및 성매매 착취	(a)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도입(특히 중소기업) (f) 학교, 대학, 군대 등 공공 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의 보다 엄중한 처벌 (g) 북한 이탈 여성을 위한 센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효과 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
“위안부”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 및 여아를 위한 내용도 포함 (b) 한일 예술충돌해지(E-6-2) 제도를 개정 (c) 여성 및 여아의 인신매매 및 약취 범죄자에 대해 유죄 판결 간수 중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 / 형사 판결 집행 유예 비율 감소를 위한 법적 조치 취할 것 (d) 피해자 중심, 인권중심의 접근법 채택 (e) 성매매에서 벗어난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구 프로그램 설계
성차별 및 고용 참여	(a)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으로 발표한 양자 간 합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은 피해자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 (b) 피해자/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물질, 보상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지켜지도록 보장하고, 재할 및 공정한 고 상당한 보상 등을 지체 없이 포함
여성, 평화, 안보	- 여성 국회의원의 수의 증가를 위해 비례대표제 조차 비율을 확대/ 강제이행조치를 수반한 여성할당제를 도입 - 경찰의 ‘남녀 노숙자 대응’을 폐지 및 여성경찰관 수 증대
국적	유엔 안보리 1325 결의(2000년) 및 후속 결의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a)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등록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절차를 도입 및 시행 (b)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후 여성의 귀화 절차의 간소화 / 당사국의 최대 법적 체류기간 내에 국적취득이 가능 하도록 필요로 하는 조치를 이행 (c) 출생관리사무소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교육	한시적 특별 조치 (비전통 전공 분야에 취학을 희망하는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나 교육 기관 여성 비율 할당 등)을 포함한 보다 효과적이고 초기 이행 교육/ ‘학교교육표준안’ 개정
고용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엄중한 집행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 (b) 여성 조산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장 (c) 인식제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
보전	- 고차적 형태의 차별을 겪는 모든 여성을 위한 노동 분야에서의 실질적 평등 제고 / 트랜스젠더의 권리보장과 비차별적 의조치를 당하지 않을 건강인권의 권리 보장 - 강간, 근간강간 임신부의 생명과 건강에의 위험, 심각한 태아 손상 등의 경우에 낙태 합법화 / 모든 여아의 경우 예도 낙태를 비범죄화하여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조치를 없애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합병증을 겪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임신중지 여성에게 양질의 수술 후 돌봄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
농촌 여성	농어업조합에서 더 많은 여성 임원 임명을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결혼 및 가족 관계	민법 제78조1항을 개정, 부계주의원칙 폐지 촉구 / 혼인관계나 사실혼 해소 시 동등한 재산 분할을 규정하는 입법 조치 취할 것 / 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결정 이전에 가해자와의 화해 시도나 중재에 강요하지 않도록 보장 / 정대에 기반한 여성폭력을 적절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호 확대를 검토할 것을 권고
북경 선언 및 행동강령	협약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북경 선언 및 행동 강령을 활용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본 협약의 조항들에 따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

* 출처: 정부비공식 번역본, 제8차 심의 최종검해 국문 번역문(2018. 4.30 기준)
(유엔 공식홈페이지 내 미검정 신본(advanced unedited version)으로 일부 자구가 수정될 수 있음)

- 이러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정부는 2년뒤인 2020년에 일부 쟁점에 대하여 중간보고서를, 4년 뒤에는 제9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금년 중 정부 합동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양성평등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 보고할 계획임.

작성자: 장은하(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참고문헌

[국내자료] 외교부, 인권자료「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file:///C:/Users/KWDI/Downloads/130%20(1).pdf> 접근일자 [2018.04.03].

한국여성단체연합(2018). 자료실<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http://women21.or.kr/overseas/10956> 접근일자 [2018.04.03]

[국외자료] 한겨레신문(2018.03.01), “유엔서 출중한 한국 여성정책…여성권리 낙후돼 있다” <http://www.hani.co.kr/arti/PRINT/834234.html> 접근일자 [2018.04.03].

<http://www.womennews.co.kr/news/42254> [접근일자 2018.04.03]

[사이트 방문] 인권운동사랑방, <http://sarangbang.or.kr/info/Un/Uni_CEDAW.html>[접근일자 2018.04.03].

LSE 블로그, CEDAW, <http://blogs.lse.ac.uk/aviv/int/cedaw/> 접근일자 [2018.04.03]

여성가족부(2018.2.21). 대한민국 여성정책, 국제사회 조약에 귀 기울여 성평등 기반 다진다.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totalSearch.do;JESSOIND_KOREA+H+9XpZ69UJ+HdR3d4fc5R_P2JL10bMPKZ_6PY+ekHfnq82G+102014807781840679?where=ALL&op=&multiFlag=Y&dt_president=&dt_newsml_code=&dt_subject_code=&dt_dept_type=&dt_dept_code=&dt_news_type=&dt_doc_type=&tabdept=18&tabsubject=18&opSearchKeyword=cadaw [2018.4.23]